

이명박-부시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남북관계 전망*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외교는 예술이다. 외교의 현장은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각축장이다. 정상회담은 그러한 외교의 정점에 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경우, 그 성과를 주시하는 다양한 눈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외교는 더욱 어렵다. 한반도의 지·전략적 위치, 주변강대국들의 힘과 영향력, 아직 덜 세련된 국내정치적 합의구조 등의 요인에다가 군사적 밀도가 가장 높은 북한을 지척에 둔 분단국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정향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정치적 정향과는 무관하게 몇 가지 준거를 기준으로 한 번 평가해보자.

첫째, 최고 정치리더십 간의 교감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믿음체제, 경력, 행위 양태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켄프 데이비드」 별장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조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친밀감을 반영한다. 미국의 외교적 ‘기술’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 한·미 정상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정상 간의 신뢰가 외교와 국가이익 추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역할 측면에서 한국이 자신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양자관계에도 도움을 주지만 한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의 외교는 한반도차원을 쉽게 넘어서지 못했다. 세계 12위권의 경제력, 올림픽 10위권 등의 위상에 걸맞도록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소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PKO 활동,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인권, 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평화외교의 확대는 분단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통일외교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 해결 측면에서 공고한 한·미 정책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여부를 떠나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대안의 모색에 있어서

* 이 글은 통일부 홈페이지 「국민광장」-‘소통과 참여’-전문가통일칼럼(<http://www.unikorea.go.kr>)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한·미간에 신뢰 있는 정책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의 생각과 접근, 대안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간에 신뢰 없이 추진된 공통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다. 한·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 다른 정책은 신뢰가 없는 공통의 정책보다 훨씬 그 효과가 높을 것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 신고 문제와 관련, 한·미간의 잘 조율된 정책 추진의 성과를 기대한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3000’에 대한 국제적 지지·협력 확보 측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은 좋은 출발점이다. 체계적 이행계획이 마련될 ‘비핵·개방·3000’ 구상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서는 국내적 지지 확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확보가 국제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나 경제적 자원동원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방미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남북한은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국제적인 협력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중·장기 국가이익의 확보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우리 측의 성의를 최대한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적 부담감을 갖도록 하였다. 동맹관계의 본질은 이익관계의 교환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초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으로부터 초강대국과 중진국 간의 동맹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국력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국제정치·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욱 클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개선이 진행되면 장차 북한 경제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 당국은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에는 매우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이명박 정부를 “친미시대대국정권이자 반북·통일정권”이라며 한·미관계 강화정책과 실용주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북남 대결과 북침전쟁의 논리”라고 비난하고 있다. 노동신문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과 정책 제안을 “친미사대, 외세추종 의식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민족’ 논리에 토대를 둔 편협한 “우리 민족끼리” 주장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의 이념적 편향성,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세계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논리로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 당국 관계의 교착상황이 단기간에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전달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북한 측이 이해한다면 남북관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최고위층의 의중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고위급이 대표가 되는 상주대표부 설치 제안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하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듯 남북대결의 논리가 아니며 남북관계를 ‘홍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비핵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등을 통해 북한도 이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개방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도 극찬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북한에게도 해(害)가 되지 않는다.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경계를 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개방·개혁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베트남이 개방·개혁으로 경제의 활력을 찾았다. 최근에는 쿠바도 개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쿠바가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수용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 측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다. 북한 측이 ‘공세적 맞받아치기’ 외교의 틀에서 벗어난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북한 측은 단기적 실리 찾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당국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